

4.5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오늘, 값 비싼 일본 자동차 및 시계에 대한 수출 금지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정부는 5일부터 고가의 일본차와 같은 고가의 제품의 수출을 금지했다. 목표는 푸틴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과두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백만장자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600만 엔을 초과하는 승용차, 60만 엔을 초과하는 오토바이, 200,000엔을 초과하는 그랜드 피아노, 40,000엔을 초과하는 천연 진주, 5월 5일부터 러시아로 향하는 새로운 금수 조치와 같은 보석류, 고품질 위스키와 귀금속을 사용한 시계 등 주류 등 19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값 비싼 제품의 수출을 중단함으로써 푸틴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과두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백만장자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일반 대중을 위해 군과 반도체로 전환할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하여 약 300 개의 품목에 대한 금수 조치를 부과했으며, 이후 인도주의 목적을 제외한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철수한 수도 쿠 근처에서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다. 키시다 총리는 4일 국무총리실에서 기자들에게 "민간인을 해치는 국제법 위반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추가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협력하고 일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 우크라이나 및 이웃 국가에 긴급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1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결정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이웃 국가들에 1억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국제기구를 통해 실항민의 안전한 이동 보장, 잔해 제거, 지뢰 및 폭발하지 않은 병기 처리 등 긴급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키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이웃 국가들에 대한 1억 달러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추가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5월 5일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일본 NG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식량, 일용품, 의약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잔해 제거, 우크라이나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뢰 및 폭발하지 않은 병기의 처분, 종자 분배를 통한 농업 생산 회복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다. 마쓰노 내각 장관은 내각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G7 및 기타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긴급히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4.7

'우크라 전쟁' 명분 삼아 군비확장 속도 내는 일본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분 삼아 군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올리는 방안을 명확히 하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구체화하기 위해 무기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자민당이 대만 유사사태(전쟁)를 염두에 두고 이달 중으로 방위비 증액과 군 장비 도입 등을 정부에 제언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인 국가안보전략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 내 방위력 강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언 시기도 한 달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민당의 제언 중 핵심은 방위비 증액이다. 방위비(국방예산)

를 현재 국내총생산의 1% 수준에서 2%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달성 시기나 매년 증액 폭 등 실현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방위비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 비율 목표(2% 이상)를 염두에 두고 방위 관계비의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위비 증액의 의지를 드러냈지만,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러시아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북한에 대처하려면, 일본이 방위력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봐도 미국은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2% 증액하고, 독일도 국내총생산의 2%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등 군비 확장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본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시 대응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이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여론의 영향이 크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3일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 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역시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방위비가) 2022년도는 (2021년도) 추경 예산과 합쳐 약 6조엔이었다.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이 정도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 약 5조4500억엔으로 아베 전 총리의 말대로 올리려면 약 11.1%의 증액을 해야 한다. 자민당은 이번 제언에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담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군 장비 도입을 요구하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방법이나 용어도 정리한다는 생각이다. 일본 정부도 무기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쿄신문>은 방위성이 방위계획대강, 이에 기초해 자위대가 갖추 무기체계를 정해 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의 연말 개정에 맞춰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증강한다는 방침을 5일 자민당 안보조사회가 비공개로 연 회의에서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무기를 증산하거나 성능을 높여 중국·북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방위성은 비공개 회의에서 '12식 지대함 유도탄(SSM)' 개조와 조기 실용화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현재 200km인 사거리를 5배 긴 1000km 이상으로 늘려 지상·함정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탑재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8

日,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G7 제재 동참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최종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8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의 침략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결속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전날 석탄 수입 금지와 단계적 축소 등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G7 회원국인 일본도 이에 발맞춰 추가 제재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에너지 문제는 각국 사정이 다르다"며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석탄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대체 조달처를 확보하면서 최종적으로 수입하지는 않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로부터 석탄 수입은 지난해 일본 총수입량의 11%를 차지했다. 일본 전력회사와 철강업체 등이 러시아와 1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고 석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뱅크와 최대 민간은행 알파뱅크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러시아군 관계자 약 400명과 군사 관련 단체 20곳에 대해서도 자산동결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해는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주일 러시아대사관 외교관과 주일 러시아통상대표부 직원 등 8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서방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 행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도 대항조치로 러시아 주재 일본 외교관을 추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협력' 적극 나서는 일본...외무상 회의 첫 참석, 중국 견제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파트너국 합동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외무상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질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분리해 논의할 수 없다"며 "나토와 일본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이 강조한 인도-태평양지역 안보는 대만 유사사태(전쟁) 가능성 등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대두하는 중국이 있다"고 전했다. 나토는 2차대전 뒤 미국이 소련의 위협에 맞서 유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만든 집단안보기구로, 북대서양조약 제5조는 체결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일본과는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해 나토와 거리를 더욱 좁혀나갈 생각이다.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상대로 좀 더 강력한 집단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나토 회의에는 회원국(30개국) 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과 우크라이나, 스웨덴, 핀란드, 조지아, 유럽연합(EU)도 참여했다. 한국·일본 외교장관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와 아시아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8일 "나토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 외무장관을 처음으로 회의에 초청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나토는 7일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나의 의제는 매우 간단하다. 3개 사항뿐이다. 그것은 무기, 무기, 그리고 무기"라며 추가 무기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4월 9일

일본-필리핀 방위협력 강화 중국 노려 첫 2+2

일본과 필리핀의 외무방위 각료협의, 이른바 '2+2'가 처음으로 열려 해양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강력히 반대하는 동시에 양국의 방위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의 '2+2'는 9일 도쿄 도내에서 열려 일본 측에서 하야시 외상과 기시 방위상이 참석하고, 필리핀 측에서는 록신 외무장관과 로렌zana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모두에서 하야시 외상은 "중국의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시도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도 계속되고 있어 우리들은 국제질서에 대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침공과 관련해, 비참한 인도상의 영향이 나오고 있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이러한 침공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용납하지 않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유럽만이 아니라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또, 일본과 필리핀 양국 사이에서 방위장비품과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위대와 필리핀 군 사이에서 물품 등의 상호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는 등 방위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日-필리핀 첫 '2+2', 중국 견제 | NHK WORLD-JAPAN News](#)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3/31/GVBRDXEZFVESDBCXAURR4H2OZI/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814430007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38124.html>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이웃 국가들에 1억 달러의 긴급 인도주의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결정 | NHK | 우크라이나의 상황](#)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오늘, 비싼 일본 자동차와 시계에 대한 수출 금지 | NHK | 우크라이나의 상황](#)